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① 06. ①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⑤ 15. ③ 16. ④ 17. ③ 18. ⑤ 19. ③ 20. ⑤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치로 본다.
-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축구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 가입 조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해 나가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행사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ㄹ.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3. 기본권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기본권 유형 중 A는 평등권, B는 청구권이다. 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 ③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 ④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절차적 권리이다.
- ⑤ 평등권과 청구권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②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국제 평화주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③ 평화 통일 지향은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 ⑤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으로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5.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국의 정부 형태는 t+1대까지는 대통령제이고 t+2대에서 처음으로 정부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했으므로 t+2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갑의 임기 중 3년차가 시작되는 날 t대 의회가 시작되었으므로, 갑의 임기 중 1년차에 갑의 소속 정당인 B당은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인 51석(직전 의회에 비해 t대에 8석이 감소되었음)을 확보하고 있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A당은 t대 의회 의원 임기 3년까지는 야당으로서 행정부 수반을 견제하고, t대 의회 의원 임기 4년차에는 행정부 수반 을이 소속된 여당이 된다.
-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6.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① 정당은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공직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7. 근로자의 권리 이해

**정답 해설 :** ⑤ 연소 근로자인 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부당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이다. 사용자가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어도 해고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갑은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갑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을의 근로 시간은 7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30분이므로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8.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국무총리, D는 헌법 재판소이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 위원 중에서 행정 각 부의 장(長)을 임명한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가 있으면 헌법 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 ④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9명 모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9.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대법원, B는 헌법 재판소, C는 법원이다. ⑤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을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다.

- ② 갑은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③ 을은 ◇◇법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C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C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C는 ◇◇법 조항이 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④ 갑, 을은 모두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10. 특수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 ③ 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로서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용자 병은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공작물 점유자인 갑이 배수관으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동물의 점유자인 정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정은 무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11. 형법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을이 2021년 12월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개정·시행된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법은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 ②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항은 금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갑에게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병이 2022년 10월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2022년 7월 신설·시행된 △△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법 제14조 제2항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형벌은 몰수이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② 갑의 법정 대리인은 A이므로 을은 B에게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을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므로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갑과 병이 체결한 의상 제작 계약은 갑의 청약과 병의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 ④ 갑은 성년일 때 병과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는 갑과 병의 의상 제작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을이 제작한 의상을 인도받은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13. 가족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④ 병의 사망 시 친생자인 C는 병의 상속인이지만 병이 A,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A와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의 사망 시 상속인은 배우자 을, 친생자 A, 친양자 B이다.
- ② 병과 정은 협의상 이혼을 했으므로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혼 신고를 한 후 정은 C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 ③ 병의 사망 시 B와 C 모두 A의 친족이다.
- ⑤ 을은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C의 사망 시 정은 C의 상속인이다.

### 14.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⑤ 갑이 항소를 포기하였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따라서 검사는 A의 행위가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 ③ 갑은 기소 전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 ④ 1심 법원은 갑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다.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15. 우리나라 지방 자치 이해

**정답 해설 :**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법률 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권한이다.

- ②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 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 수단이다.

### 16.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러한 계약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②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17.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③ 갑이 을의 휴대 전화를 손괴한 행위에 대해 검사는 과실에 의한 손괴는 법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갑이 을의 휴대 전화를 손괴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갑의 부모는 을의 상해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배상 명령 제도는 유죄 판결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하여 갑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④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따라서 검사는 갑의 상해 혐의가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 ⑤ 검사는 병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판단하였다.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⑤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갖는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로 고정되어 있다. 비상임 이사국

---

의 임기는 2년이며, 매년 총회에서 5개국을 선출한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총회의 결의안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강조한다.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 2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갑국은 현행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서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 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한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4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면, 특정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은 지역구 50석, 비례 대표 100석으로 150석이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ㄴ. <2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ㄷ. <3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150석,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150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총의석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